

# 일제하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류 승 렬

I. 머리말	IV.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 강요의 내용과 방식
II.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와 조선 ‘특수 사정’론	V. 지배 이데올로기 注入 遲滯와 강제의 강화
III.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造成	VI. 맺음말

## I. 머리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경향을 돌아보면 근래 다소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sup>1)</sup>

새로운 경향은 크게 두 흐름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시체제론이나 총력전론 등과 함께 과거의 ‘(대)일본 제국’을 회상케 하는 ‘제국’론적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담론 위주의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며,<sup>2)</sup> 다른 하나는 조선의 독자성에 주목하는 경향이다.

먼저 ‘제국’론적 접근이다.<sup>3)</sup> 종래 연구가 일국사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을

---

1)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연구의 전반적 추세와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류승렬, 2007 <한국의 일제강점기 ‘동화’론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역사와 현실》 65

2) 본고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경향을 정리한 글로는 다음이 참조된다. 안자코 유카, 2001 <日本과 시즘론 연구동향-일제말기 식민지 조선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6 ; 다나카 류이치, 2004 <일본 역사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東아시아’의 ‘근대’> 《역사문제연구》 12 ; 마쓰모토 다케노리, 2004 <‘總力戰體制’論과 ‘現代’-일본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면서-> 《역사문제연구》 13 ; 홍수경, 2006 <‘총력전체제’론의 이해를 위하여 : 야마노우치 야스시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학림》 27

3) 최근의 ‘제국’론적 연구로는 다음이 참조된다. 駒込武, 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岩波書店); 小熊英二, 1998 《‘日本人’의境界》(新曜社); 山室信一, 2001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基

저변에 깔고, 일제 제국의 판도에 속했던 지역 전체를 묶어 식민지 ‘제국’이라는 단일의 공간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sup>4)</sup> 연구 경향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을 인정하더라도 연구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는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계승·변모를 모색하는가 하는 점과 연구가 지향하는 바나 근거로 삼는 이론 또는 모델의 내용과 성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매개 고리 없이 내용이나 방법 중 일부만을 따올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다음으로 조선에서 전개된 일제 파시즘 지배 체제의 구조와 성격 및 그 실상을 밝히려는 연구나,<sup>5)</sup> 조선 나름의 독자적 정치 활동을 상정하려는 경향<sup>6)</sup> 등이 주목된다.

식민지 조선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의 여러 정치 세력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으로 일본 본국의 내각, 정당, 민간, 재계 등과 조선 내의 조선총독·軍部·경찰·조선총독부 관료·각종 官邊 이데올로그들·민간 단체와 재계, 만주의 제 세력 등이 서로 錯綜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해나갔는가 하는 점,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는 시기별로 어떤 계기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가 하는 점, 일제의 지배 版圖의 확대에 비교적 기민하고 一元的으로 대응한 조선통치 세력의 움직임과 그들이 조성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조선적 특징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등을 확인하는 데 조선적 독자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일본 제국주의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주목한 종래 연구의 문제 의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연구 경향의 중요한 특징도 고려할 것이다. 특히 일제의 침략 전선이 확대되고 일제의 판도에 속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조선 통치세력이 보여준

軸·連鎖·投企》(岩波書店)；山本有造, 2003 《帝國の研究－原理・類型・關係－》(名古屋大學出版會)；松田利彦・淺野豊美 編, 2004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信山社)；2005 《年報 日本現代史 第10號 ‘帝國’と植民地－‘大日本帝國’ 崩壊60年－》(現代史料出版)；木畑洋一, 2008 《イギリス帝國と帝國主義－比較と關係の視座－》(有志舎)

4) 다나카 류이치, <앞 글> 152 참조.

5)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가 참조된다. 방기중 편, 2004 《일제 파시즘 지배정체과 민중생활》(혜안)；방기중 편, 2005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혜안)；방기중 편, 2006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혜안)

6) 竝木眞人の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1993 <植民地期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31 (綠蔭書房)；1999 <植民地期朝鮮政治・社會史研究に關する試論>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紀要》6；2003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性’・‘植民地公共性’・對日協力－植民地政治史・社會史研究のための予備的考察> 《國際交流研究(フェリス女學院大, 國際交流學部紀要)5》

독자적 움직임과 통치 담론의 변화를 심도있게 살필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지배 이데올로기 구사를 보면 정책과 담론의 경계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담론적 속성이 지배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본 본국과는 처한 상황이 달랐던 데 더하여 조선총독의 특수한 위상이 결부되면서 마련된 조선 나름의 독특한 위상은 조선 통치와 관련하여 독자적 움직임이 전개될 여지를 제공하였다.<sup>7)</sup>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결부시키면서 담론 분석 위주로 접근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선전이나 操作作用 文句의 이면에 놓인 역사적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특히 일제가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事實과 談論을 연계시키면서 정책 시행의 본래 의도나 현실의 부족함을 매워나갔을 뿐 아니라,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의도에 합당한 假想의 현실을 실제처럼 여기게 만드는 교묘한 二重性을 구사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정책과 표방, 의도와 실행이라고 하는 서로 表(建前=다데마에)·裏(本音=혼네)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일제의 제반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일제 말기로 갈수록 사실상은 상호 작용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로 표현된 통계나 확실한 문안을 가진 정책이나 법령에 비해 담론상으로 표출된 내용이 실상에 가깝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Ⅱ.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와 조선 ‘특수사정’론

소위 ‘朝鮮統治 세력’은 본국 정계나 조선 내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sup>8)</sup>

7)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국’론적 연구의 경우 비교와 관계의 관점을 내세우며 영국의 사례를 끌어와 ‘제국’ 일반에 대한 논의로 변형시킴으로써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종래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뀐 것을 빌미로 구체적 사실과 실상을 드러내기보다는 미국 등에서 제시된 ‘제국’론 등의 이론적 모델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담론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유도해내려고 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작동 메커니즘과 구조적 모순 및 파멸에 대한 인식은 일반론 속에 희석될 뿐이다. 또한 조선의 독자성, 조선통치 세력의 독자적 성장, 조선내 정치공간의 확보라는 인식도 일반화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선 독자 정치 공간과 정치 세력의 형성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는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조선통치 세력은 각 시기마다 내용과 특징은 달랐지만 조선통치와 관련한 각종 담론을 조성하여 조선통치의 독자성 확보에 활용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출현한 朝鮮 ‘特殊事情’論 및 그에 입각하여 시행한 각종 정책이나 표방한 정치 슬로건, 각종 자기 합리화 담론의 내용 및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9)</sup> 조선 통치세력의 성격이나 지배 체제 및 구체적 지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가 구사한 각종 정치 슬로건이나 담론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10)</sup>

조선통치 세력의 독자성 확보 시도와 각종 담론 구사에서 조선총독의 독특한 정치적 위상이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특히 만주국과의 밀접한 관련 등에 대한 강조, 조선의 가치, 조선인 활용의 중요성 등을 부각하면서 각종 정치 슬로건이나 담론을 조성하고 선전했음은 물론이다.

일제는 1910년대 이후 조선의 일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실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유보할 때 흔히 ‘時勢와 民度’를 거론하였다. 이때 일본제국 版圖上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함을 강조하는 한편, 조선인의 민족적 결함이나 능력과 수준의 미숙함 때문에 동화의 실현이 지지부진함으로 식민지 권력에 의한 장기간의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11)</sup>

8) ‘조선통치 세력’이란 표현은 조선총독, 조선총독부 관료, 조선군, 조선에 살고 있거나 조선과 이해를 같이한다고 표방하는 일본인 지식인과 민간인들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필자가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식민지 파시즘, 조선 ‘특수사정’론, 宇垣一成·南次郎 총독기의 지배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 방기중, 2004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혜안) ; 방기중, 2005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중일전쟁기 전체주의 경제론을 중심으로->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혜안) ; 방기중·전상숙, 2006 <일본파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혜안)

9) 조선 내의 경우 일제 선전과 관련한 연구가 있으며, 담론적 접근도 최근 행해지고 있다. 또한 만주국에서 일제가 구사한 선전 담론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소위 ‘제3 제국’론과 함께 벌였던 선전·선동을 파시스트 지배 정책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그 범죄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일본 제국의 이름으로 전쟁과 희생을 부추긴 각종 통치 담론의 범죄성을 분명히 규명하지 않았던 까닭에 여러 ‘제국’론이 거리낌없이 등장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10) 일본의 경우 천황 부부와 전쟁 희생 장병의 圖像을 중심으로 성전론이 조성되고 선전된 프로세스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川村邦光, 2007 《聖戰のイコグラフィ 天皇と兵士・戰士者の圖像・表象》(靑弓社)

그런데 1930년대 이후 宇垣一成·南次郎 총독기에 조선통치 세력의 움직임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宇垣一成은 농공병진정책과 함께 조선 ‘特殊事情’論을 부각시켰으며, 南次郎은 나름으로 조선통치 이데올로기의 논리와 구체적 방안을 정립하였다.

宇垣一成 총독은 조선 ‘特殊事情’論을 종래 강조해온 ‘時勢와 民度’와 대치시킴으로써 조선통치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마련해나간다. 구체적으로 日·鮮·滿블록론과 농공병진론을 두 축으로 하면서 나름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南次郎 총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內鮮一體’·‘皇國臣民’化論이라는 조선인 정신 개조 기획과 구체화를 위한 방안까지 포함하면서 더욱 정교한 논리 체계를 형성한다.

특히 南次郎 총독기에는 조선통치 세력의 독자적 기반 확보 시도와 조선인 정신 개조 기획이 두 축을 이루면서 한꺼번에 추진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 구사의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종래 조선인의 처지와 조건을 거론하면서 ‘文明化’의 실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하던 태도를 돌변하여, 이제 ‘日本精神의 涵養’이라는 주관적·정신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기 필요의 일방적 관철에만 관심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조선통치 세력이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했던 조선 ‘특수사정’론과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는 1940년대 징병제 시행 담론이 대두하면서 내용과 성격에 커다란 변질을 겪게 된다. 조선인은 내선일체의 결실을 맺기 위해 끊임없는 연성으로 황국신민화, 즉 ‘참된 일본인’ 되기에 매진해야 하며 천황폐하의 赤子로서 성스러운 神의 나라 일본을 위해 헌신·희생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가 새로이 부각된다.

결국 조선 ‘특수사정’론은 일본 본국의 聖戰論·大東亞戰爭論<sup>12)</sup>에 조선 나름의 황국신민화론·연성론이 결부되면서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 헌신과 희생을 다그치는 조선인 殉國 촉구 담론 속에 녹아들면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희생·헌신의 내선일체론이기는 하지만 이를 내세울 경우라도 제기될 수 있는 일본인과의 동등한 권리 요구

11) 권태억, 2004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 《한국사연구》 124 ; 정연태, 2004 <조선총독 寺內正毅의 한국관과 식민통치 - 점진적 민족동화론과 민족차별 폭압장치의 이중성> 《한국사연구》 124

12) 聖戰論과 大東亞戰爭論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有馬學, 2002 《日本の歴史23 帝國の昭和》(講談社); 川村邦光, 《앞 책》 특히 《帝國の昭和》에는 제5장 ‘革新の光明?’의 <2. ‘聖戰’과 ‘革新’>·<3. ‘再編成’といふ‘革命’>과 제6장의 ‘總力戰の諸相’의 <2. ‘大東亞戰爭’과 ‘共榮圈’>에서 그 이념적 지향을 잘 소개하고 있다.

를 차단하고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內·鮮 간의 차별성을 전제로 한 ‘참된 일본인’론·‘진정한 황국신민’론 등을 앞세우는 ‘황민연성의 단계’가 새로이 설정된다.

식민지 조선통치 세력이 나름으로 조성하여 구사한 지배 담론의 중요한 내용상의 특질을 지적한다면, 조선의 독자성을 근거로 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인의 ‘皇國臣民’화를 실행하기 위해 전개한 攻勢的 이데올로기 操作이었다는 점, 日·鮮·滿블록론과 鮮滿一如論을 연결시켜 제기한 점, 식민지 조선의 內地 일본에 대한 先導的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제국을 향한 헌신과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촉구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Ⅲ.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造成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구사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시기별로 상당한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1930년대 중반에 제기된 ‘內鮮一體’·‘皇國臣民’論은 그 내용과 의미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전부터 주창되던 내선일체론에 새로이 황국신민화론이 결부된 것은 조선통치 세력이 일본 본국과 조선 내부의 양자를 동시에 겨냥하여 선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펼친 지배 이데올로기 宣傳 企劃으로 자리하게 된다. 내선일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나왔을 뿐 아니라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를 황국신민화라는 교묘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벗어나게 된 것은 조선통치 세력에게는 획기적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의 영향과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대두 전후의 변화상을 대비하여 검토해야 한다. 양자를 비교하면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宇垣一成 총독기의 ‘內鮮融和’論에 이르기까지는 나름대로 일관된 원칙 즉 ‘時勢와 民度’에 조응한 점진적 內地延長主義의 실현이라는 방향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南次郎 총독기에 내선일체·황국신민화론이 대두한 이후 이제 조선인은 개별적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半島人, 一億一心·兆億心の 구성 요소, 2천 4백만 半島同胞 등과 같이 집체적인 덩어리로서 대상화되어 취급된다.

그 전환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文明化’로부터 ‘日本精神의 涵養’으로,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주관적·정신적 측면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선

면에서 대상인 조선인을 일정하게 의식했던 데서 이제는 일제의 恣意的·의도적인 자기 필요의 일방적 관철만을 위주로 하는 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 1> 일제 지배 이데올로기 관련 언급의 시기별 변화 양상

<p>전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寺內正毅 총독 : 古來 我國에 이주한 조선인을 동화시키지 못한 것은 봉건시대의 제도적 결함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足利 시대에 백제·신라의 이주민들이 一揆를 일으켰기 때문에 武家の 반감을 사고 武藏의 병사들에게 쫓겨나 흩어져 각지로 잠복했기 때문에 일반 일본민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었고, 德川 시대에 이르러서는 몇 차례 완화되기는 했지만 인습이 오래되어 끝내 동화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만 一新한 후 陛下의 親政에 의해, 제반 제도의 개혁에 수반하여, 특히 계급차별의 인습을 타파시킨 이래 그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학대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만약 그러한 일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聖代の 愼事인데, 해를 거듭하면서 특중부락사회에 교육 문화를 보급함에 따라 教化가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차별은 눈 녹듯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조선민족을 일본인이 同化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없다. 총독부는 지금 바로 同化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나, 착착 그를 위한 준비와 조사 중이다.<sup>13)</sup></li> <li>• 長谷川好道 총독 : 조선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적 민족성이 있는데 同種同文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同化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新法의 위세로 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통치 방침은 同化主義에 입각하지만, 파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주의인 것이어야 한다.<sup>14)</sup></li> </ul>
<p>중 기 = 전 환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宇垣一成 총독시대를 보더라도, 민중은 매년 줄지 않는 負債의 산을 보면서 일어설 용기를 잃었고, 총독의 결사적인 自力更生, 心田開發의 격려에 간신히 자포자기의 늪에서 구제되는 모양이었다. 따라서 그 思想 상황, 생활 수준, 교육 정도 등 모두가 內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정책은 조선 자체의 안녕과 민중의 갱생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이런 실정은 우가키 통치의 최고 공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농촌진흥운동에 대해서 보아도 분명하다. 즉 宇垣一成 총독은 민중에게 근로 애호에 의한 자력갱생을 강조, 심전개발의 슬로건 아래 그 철저화를 꾀하고, 또 근로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色服 장려를 행하여, 종래의 白衣의 착용을 억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중공업화정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외에 南綿北羊 등 國策的 經濟綱領도 있었지만, 필경은 半島 全戶數의 8할을 점하는 농가 경제의 회복을 당시의 실정에 조응하여 촉진, 민중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즉 25년간의 조선통치는 內地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한 과도적 계몽기였고, 宇垣 시대 말기부터 南시대 초기까지는 半島 自力更生の 발흥기라고 볼 수 있다.<sup>15)</sup></li> </ul>
<p>후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들은 이즈음 특히 半島人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일전쟁 하에서 ‘內鮮一體’의 자각은 크게 진전되었다. 5년 전, 10년 전에 비교하여 생각하면 전혀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li> </ul> </li> <li>• 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小磯國昭 총독 : 이래 반도 衆庶의 自覺과 民度の 향상을 보았던 것이고, 특히 중일전쟁 후에는 半島同胞의 皇民이라는 자각이 갑자기 심화되었고, 이 사이의 半島大衆의 경제적 향상이 현저해짐과 더불어 半島敎學이 극히 순조롭게 진전을 거두어왔음은 정말 모두 기뻐할 일이다.<sup>17)</sup></li> <li>• 倉島忠(조선총독부 정보과장) : 皇道 일본의 대포용, 內鮮一元의 대야마토 민족 본래로의 還元은 착착 완성되고 있다. 內鮮은 이미 一體이며 一心이다. 이 가을에 아직 內와 鮮을 나누고 內地人을 待望하는 까닭은 즉 이런 醇良한 일본정신의 침투에 의하여 內鮮一體의 더욱더</li> </ul> </li> </ul>

	<p>좋은 완성을 기하고, 그럼으로써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완전한 根幹이 되도록 하려는 것일 따름이다; 內鮮의一體는 日滿의一體, 日華의一體와는 전혀 그 의의를 달리한다. 日滿의一體는 協同이고, 日華의一體는 提携지만, 內鮮一體는 協同이라든가 提携라든가 하는 정도의 간단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一心一體, 하나의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內鮮一體는 궁극에 內鮮의 구별을 없게 함에 있다. 內鮮 문제의 結着點은 여기에 있고, 이리하여 또한 조선의 사람들도 완전한 일본인으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선택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p>
--	---

정책 전환 이후 일제는 ‘內鮮一體’는 역사적 宿命이라고 내세운다.<sup>19)</sup> 아울러 그동안 강조하던 ‘時勢와 民度’論을 대신하여 ‘內鮮渾然一體’로 “2천 4백만의 동포가 一億皇民의 중요 조성분자로서 똑같이 히노마루의 傘下에서 大東亞에 지도적 국민으로서의 영예를 파악하는 훌륭한 운명의 啓開에 깊이 감격하여, 發奮興起, 완전한 자체교육의 의무의 이행에 힘쓰고, 그럼으로써 소기의 목적 달성에 一路邁進하여 決戰體制 하에 능히 국가의 戰時 요구를 충족시켜, 더욱 國運의 진전에 공헌하여 上 聖明의 信倚를 받들기로 祈念하여 마지않는다.”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sup>20)</sup>

이후 談論上の 변화는 內鮮一體·皇國臣民化論으로부터 一億一體論, 나아가 戰士로서의 先導的 獻身論과 같은 희생·헌신의 내선일체론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더욱 빠르고 또 현저하게 진행된다.

결국에는 다음의 지적에서 드러나듯이 객관적 현실은 따질 것 없이 ‘血의 本然에 기초한 필연적 大復古’라는 根本主義的 방식의 ‘大還元’論까지 퍼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선구자이자 지도자인 內地人을 절실히 기다려왔다. 皇道 일본의 大抱擁, 內鮮一元의 大야마토 민족 본래 상태로의 還元은 잘 완성되고 있다.”<sup>21)</sup>

“內鮮一體는 말로는 비교적 새롭고, 宇垣 총독기의 말년경부터 슬슬 사용되어, 南총독에 들어서 시정의 최대강령으로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 이전에는 오직 內鮮融和라는 말이 사용되었

13) 青柳綱太郎, 1929 《總督政治史論》(京城新聞社) 251~252

14) <長谷川總督の事務引繼意見書>

15) 御手洗辰雄, 1942 《南總督の朝鮮統治》(京城日報社) 2~3

16) 1941, <社説 義勇奉公の秋! 半島人青年の蹶起を待望す> 《內鮮一體》 9월호, 2

17)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에 즈음하여 1942년 12월 5일 총독부에서 개최된 교육심의위원회 석상에서 고이소(小磯)총독이 훈시한 내용이다. 高宮太平, 1944 <皇民鍊成의基礎構築> 《小磯統理의展望 第二輯》(京城日報社) 122

18) 倉島至(朝鮮總督府 情報課長), 1942 《前進する朝鮮》(朝鮮單式印刷株式會社) 9·21

19) 鹽原時太郎, 1938 <序> 《皇國臣民教育の原理と實踐》(朝鮮公民教育會)

20) <聖明の信倚に對へ奉らん> 高宮太平, 1944 《小磯統理の展望 第二輯》(京城日報社) 131

21) 倉島至(朝鮮總督府 情報課長), 1942 《前進する朝鮮》(朝鮮單式印刷株式會社)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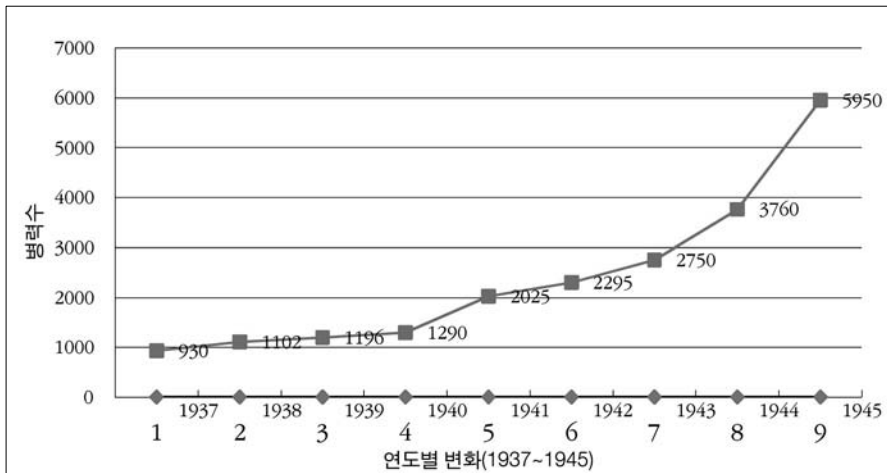


던 것인데, 무엇이라고 표현되더라도, 그것은 이미 분명해진 바와 같이 祖先的인 血의 本然에 기초한 필연적인 大復古이고, 今日에는 內鮮一體도 또한 過渡的인 말에 불과하고, 조선은 지금 대동아공영권의 組成에, 大日本民族으로서의 발전적인 大還元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1940년대 들어 징병제 시행을 골간으로 한 새로운 통치 담론이 조성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 할 것이다.<sup>23)</sup> 징병제 시행이 급작스럽게 정해지자 그를 합리화할 통치 담론을 조성하고 선전하는 한편으로 구체적 실행을 준비하는 작업에 급급히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 전황이 급박해지자 다각도로 그 타개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4)</sup> 특히 급속한 전선의 확대와 병력 자원의 소진으로 인한 동원 병력 확보는 절박했고, 그 타개의 방향은 조선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었다. 여기서 특히 핵심 사안으로 대두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는 지상의 급무로 설정되었다.

〈표 2〉 일본 육군 병력수 변화 (단위 : 천명)



22) 朝鮮總督府 情報課長 倉島至, 1942 《前進する朝鮮》 (朝鮮單式印刷株式會社) 21  
 23) 南次郎 총독은 “이번의 징병제도로 내선일체의 정책은 절정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과거의 모든 노력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노력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宮田節子(李榮娘 譯), 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120  
 24) 南次郎 총독이 1939년 1월 “대저 본 사면은 동원 병력량과 교전지구의 확대 및 세계적 關涉의 심각 복잡 미묘함”으로 인해 미증유의 규모라고 하며 아직 전쟁 초반임에도 동원 병력의 증가에 놀라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南次郎, 1939 <協同興亞の大精神> 《朝鮮行政》 1월호 2~3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군의 병력 수는 194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sup>25)</sup>

이처럼 일본군 필요 병력 자원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침략 전선의 확대와 침략 전쟁의 격화에 따라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엄청난 전사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막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동원 가능 병력 자원의 절대적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표 3>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 지역별 현존 병력 수와 전사자 수

1945. 8. 15 현재 지역별 현존 병력 수				전사자 수 (1937. 7. 7~1945. 8. 14)
일본 본토 주변	조선	그 외 지역	병력 총수	
4,335,500	335,900	3,217,700	7,889,100	1,940,100

출전 : 1964년 3월 1일 일본 후생성 원호국 작성(권석근, 2007 《일본제국군》 (코람테오) 384 재인용)

이처럼 절박한 사태에 당면하여 모색된 조선인 대상 징병제의 실시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 사항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어 구사 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징병 대상 조선인 청년 중 일제가 파악한 일본어 해득 가능자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심하다고 개탄하는 지경이었다.

<표 4> 징병 대상 조선인 청년 중 일본어 해득·불해득 추정 인원 수 비교

연도	징병 적령자 추정 인원	일본어 해득 가능 추정 인원	일본어 불해득 추정 인원
1941	193,007	50,735(26%)	138,924(74%)
1942	214,229	51,959(24%)	158,434(76%)
1943	224,936	54,930(24%)	165,679(76%)
1944	203,112	61,362(30%)	137,741(70%)

출전 : 조선총독부, 1942 《極秘 朝鮮人徵集ニ關スル具體的調査》

따라서 이러한 곤란을 메울 임기응변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가장 기본 조건으로 국민학교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小磯國昭 총독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역대 총독이 국민교육의 진전 향상에 힘을 기울였고, 교육자 또한 皇民鍊成에 부단히 노력

25) 大濱徹也·小澤郁郎 편, 1995 《帝國陸海軍事典》 (同成社) 13 참조.

을 傾倒하여, 施政 32년 半島의 敎學이 다행히도 왕성하게 발흥하고 … 徵兵制의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臨機應變의 조치로서 朝鮮青年特別鍊成令의 공포를 보았던 것인데, 皇民鍊成의 根底는 이를 國民學校의 敎育에서 복돋우어야 한다는 점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本總督은 이에 감연히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결정하고, 급속한 국민교육의 보편 교화를 기도한다.”<sup>26)</sup>

징병제 실시로 동원될 조선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구비케 하기 위한 필요에서 불가피하게 모색된 의무교육제도는 다음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줄속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이 의무교육의 제도를 펴서 공공단체에 국민학교를 설립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학령기에 있는 아동을 가진 부형에 대하여 그 자제를 國民學校에 취학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지웠는데, 대략 그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 있음을 간파하였으므로, 이에 교육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최단기간의 준비시기를 두고, 이의 단행을 결정하였다.”<sup>27)</sup>

이렇듯 상황에 내몰리게 된 일제는 급작스런 태도의 돌변이 자기들의 기존의 정치 체로건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덮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황의 변화를 역규정하는 방식으로 강변하려고 하였다.

“돌이켜 반도에서의 초등보통교육 발전의 경과를 살펴건대, 누차에 걸쳐 교육령을 개정하여, 1929년 1번 1교 계획의 수립, 1934년 이후의 간이학교의 설치 등 순차로 진전을 보였고, 더욱 1937년에 이르러 제1차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예의 이의 보급의 촉진에 노력해온 바, 이래 반도 衆庶의 자각과 민도의 향상을 보았던 것이고, 특히 중일전쟁 후에는 半島同胞의 皇民이라는 자각이 갑자기 심화되었고, 이 사이의 半島大衆의 경제적 향상이 현저해짐과 더불어 半島敎學이 극히 순조롭게 진전을 거듭어왔음은 정말 모두 기뻐할 일이다.”<sup>28)</sup>

조선인들 사이에 황민이라는 자각이 갑자기 심화되었고 조선인 대중의 경제적 향상이 현저해졌다는 식의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서도 급변하는 사태에 얼마나 긴박하게 대처하려 했던가를 잘 살필 수 있다.

결국 戰線의 확대와 전쟁의 격화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된 병력 자원 확보책으로서의 조선인 대상 징병제 실시, 이것은 일본제국의 사활에 관련된 문제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물론 일제는 “조선 동포에 대한 징병제도의 시행이 일본 육군의 병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피해진 것처럼 유포한 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듣고 있

26) 高宮太平, 1944 <皇民鍊成의基礎構築> 《小磯統理의展望 第二輯》(京城日報社) 120~122

27) 高宮太平, 1944 <聖明의信倚に對へ奉らん> 《위 책》(京城日報社) 127~128

28) 高宮太平, 1944 <皇民鍊成의基礎構築> 《위 책》(京城日報社) 122

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방면에서 유포된 것인가는 여기서 굳이 따지지는 않겠지 만, 참으로 천만부당하며, 無思慮하고 심한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군대는 결코 형무소는 아니라”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인 것을 볼 때 오히려 일제의 절박한 사정을 더욱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sup>29)</sup>

이처럼 일제는 병력 자원의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조선의 ‘半島靑年’에 대한 징병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을 검토해왔으나 시기상조라고 결론지은 바 있었다. 그런데 징병제가 시행될 상황을 예상하고 이를 독자적 세력 기반의 강화에 결부시키면서 나름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조성하여 공세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南次郎 총독과 鹽原時三郎 학무국장 콤비였다. 특히 國粹主義者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는 鹽原時三郎은 ‘皇國臣民’이란 신조어를 만들고 ‘皇國臣民’論을 창출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상 조선통치 세력 나름의 독자적 체계를 창출해냈던 것이다.<sup>30)</sup>

즉, 1938년 조선의 <소학교규정>을 개정한바, 본래적으로 황국신민이 아닌 조선인에 게는 더욱 엄격한 황민화를 강요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 조선의 광신적 파쇼화는 일본보다도 한발 앞섰으며, ‘황국신민’이라는 조어 그 자체가 이러한 조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점이야말로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의 핵심이자, ‘오늘의 반도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한 학무국의 대답이며, 조선군의 의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이기도 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교육의 파쇼화도 촉진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라는 지적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sup>31)</sup>

29) 朝鮮軍事普及協會 編, 《朝鮮軍報道部監修 朝鮮徵兵準備讀本》 104~107

30) ‘皇國臣民’이란 용어는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의 新造語이다. 당시 有識者 중에는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고, 日本帝國議會에서 ‘帝國臣民’이란 말이 있는데 왜 이런 용어를 쓰려 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金順楨·田村榮章, 2003 <日本の修身教科書研究－學務局長鹽原時三郎と皇民化教育政策> 《日本語文學》 19

31) 宮田節子, 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117~118

## IV.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 강요의 내용과 방식

### 1. ‘皇國臣民’ 化論과 鍊成論의 결부

조선통치 세력은 일본 본국과 달리 ‘내선일체’·‘황국신민화’론을 결부시키면서 조선인의 ‘皇民’화를 다그쳤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 본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皇民’이란 개념과 식민지 조선인만을 특정하여 사용된 ‘皇國臣民’이란 개념의 차이 및 그 차별적 사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일제는 끊임없이 내선일체를 외치면서도 조선인의 일본인화, 즉 조선인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다소라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주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제 황국신민론을 제시하면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기 부정과 ‘진짜 일본인화’라는 희귀한 사명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진짜 일본인화’를 향하여 끝없는 단련이라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주문하는 조선인 연성론을 여기에 덧붙인 것이다. 이들 양자의 결부는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상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본토에서 ‘皇民의 鍊成’이란 말은 “고노에 내각에서 오랫동안 勅諭를 받들어 창설된 교육심의회가 숙의를 거듭하여 만들어낸 ‘국민학교안’ 중에 사용된 이래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계에서도 자주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32)</sup> 아울러 ‘鍊成’의 의미에 대하여, 이 말이 “처음 초등학교안에 나온 무렵 사람들은 금시초문으로 변화를 느끼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종래의 교육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암시, 아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sup>33)</sup>라고 하듯이, 교육의 혁신을 꾀하려는 필요에서 긴급히 제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의 鍊成論 내용 비교

구분	일 본	조 선
출현	敎學刷新評議會가 제시(1936. 11)	南次郎 總督이 처음 언급(1938년 전후)
강화 계기	국민학교 체제 출현	戰況의 악화에 조용하여 전일적으로 확산되고 부 문별로 심화되어 감
내용	• 國策이 要望하는 大國民의 鍊成	이중 목표를 가짐(조선인의 總力戰의 資質을 끊임

32) 草場弘, 1943 《皇民鍊成の哲理》(第一出版協會藏版) 64

33) 草場弘, 1943 《皇民鍊成の哲理》(第一出版協會藏版)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젠든 모두를 아낌없이 바칠 膽力 培養</li> <li>• 國家總力戰 戰士 양성 위한 가정·학교·사회 상호 三者一體의 실현</li> <li>• 기백 있는 大國民의 육성</li> </ul>	없이 鍊磨育成+天皇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皇國臣民으로의 改造)
공극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鍊成을 위해 직접성과 구체성, 진실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자</li> <li>• 皇國教育의 究極의 바는, 天皇의 大御心에 副奉함</li> </ul>	조선인을 皇國臣民으로 改造하는 特別 鍊成
실천 목표	현장에서 鍊成의 効를 거두자, 아동은 곧 멀리 北滿의 地에, 몽고의 奧地에, 南洋의 섬에서, 전투하고, 개척하고, 건설하고, 지도한다.	皇道主義+內鮮一體·同化+忍苦鍛鍊=>忠良한 皇國臣民의 육성 학교 교육에서 鍊成의 무제한의 확대를 통한 군사 훈련, 군사동원의 대비
구체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生活 一切의 鍊成</li> <li>• 자기 供奉의 鍊成</li> <li>• 일하는 교육</li> <li>• 掃除의 교육</li> <li>• 조용함의 교육</li> <li>• 朗詠의 교육</li> <li>• 拜하는 교육</li> <li>• 宿泊訓練</li> <li>• 武士道の 鍊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7. 10월부터 皇國臣民의 誓詞 齊誦, 皇國臣民體操 보급 시작</li> <li>• 국민학교 제도 시행(1941. 4. 1)에 즈음하여 皇國臣民 육성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설정함</li> <li>• 朝鮮靑年特別鍊成令 발표(1942. 10. 24)</li> <li>• 조선총독부 學務局에 鍊成課 설치(1942. 11. 1)</li> <li>• 國民總力朝鮮聯盟에 鍊成部 설치(1942. 11. 4)</li> <li>• 이후 노동자·농민·여성·관공리 등 대상의 鍊成機關으로 修練道場 설치</li> <li>• 1945년 초 國民總力朝鮮聯盟의 國民義勇隊中央本部로의 개편</li> </ul>
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志賀匡, 《大戦下の國民學校 皇民鍊成の實際》, 東京 秋文堂藏版, 1942</li> <li>• 草場弘, 《皇民鍊成の哲理》, 第一出版協會藏版, 19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재정, &lt;일제하 조선에서의 국가총력전체제와 조선인의 생활-‘황국신민의 연성’을 중심으로&gt;,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2005</li> <li>• &lt;朝鮮ニ於ケル教育ニ關スル方策&gt;(1937년 12월),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제39권</li> </ul>

그러나 <표 5>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에서는 ‘鍊成’이 훨씬 고강도의 단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조선에서의 ‘연성’은 천황을 위해 물자는 물론이고 신체와 마음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일본인, 즉 황국신민으로 개조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가정·학교·부락·단체·직장·공장·군대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조선인의 총력전적 자질을 끊임없이 연마 육성하는 정책으로서 ‘황국신민의 연성’이 지상의 목표로 내세워졌던 것이다. 총독 취임 이후 小磯國昭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국가 총력전에 적합한 인간형으로의 개조가 지상의 목표가 되고, 전황의 악화에 조용하여 전일적으로 확산되고 부문별로 심화되어 갔다. 그는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는 특별연성이야말로 최대 최선의 급선무라고 여기고 전일적으로 추진해나갔다.<sup>34)</sup>

여기서 유의할 중요한 사실은 조선통치 세력은 일본에도 없던 이데올로기나 조직을 조선에서 선도적·공세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렇게 조성된 이데올로기나 조직적 경험이 일본에 역유입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만들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애국일 행사를 거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도 없던 행사였다.<sup>35)</sup>

우선 ‘皇國臣民’論이 일본 본국으로 거꾸로 유입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南次郎 총독이 창안하여 적극 내세운 ‘皇國臣民’論이 일본 본국으로 逆流하여 문부성이 1941년 편찬한 《臣民의道》에 “천황에 절대 수순하고 奉하는 황국신민의 도야말로 皇運扶翼의 道”라면서 <皇國臣民으로서의 修練>이란 항목이 ‘臣民의 道’ 실천 방안으로 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sup>36)</sup>

또 南次郎 총독이 정신총동원운동을 일본 본국에 앞서 조선에서 선구적으로 시행한 것은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全日本에 전개된 精動運動은 이미 조선에서 행해지고 있던 皇民化運動의 主眼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도 조선의 精動이 内地에 一步 선구적인 것이라는 점은 자랑할 만하다.”<sup>37)</sup>

또한 다음의 지적에서 보이듯이 일제 전시체제의 하부 실천기구였던 애국반(일본 본국의 隣組에 해당) 조직 체계 역시 조선에서 먼저 시작되어 일본으로 이전되었던 것이다.

“조선 精動運動은 특히 그 조직에 있어서 탁월하였다. 즉 하부조직의 실천기구로서 愛國班의 설치이다. 愛國班은 内地의 隣組에 선구적 형태로서 연맹의 세부조직인 正·동·리·부락 연맹 및 각종 연맹의 세포로서 운동의 실천적 중심을 이루었다.”<sup>38)</sup>

34)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에서 정재정은 국가총력전체제기의 황국신민화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양상을 ‘연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가총동원과 조선인의 생활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선일체라는 정태적 개념보다는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동태적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본고는 여기서 황국신민론과 연성론을 결부시킨 데 큰 시사를 받았으며, 여기에 내선일체론과 징병제 시행론을 덧붙여 일제 지배체제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재정, <일제하 조선에서의 국가총력전체제와 조선인의 생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5, 410~411·425

35) 정재정, <위 논문> 420

36) 久松潛一, 1941, <解題 ‘臣民의道’의精神> 《文部省編纂 臣民의道》(朝日新聞社版)

37) 御手洗辰雄, 1942 《南總督の朝鮮統治》(京城日報社) 26

38) 御手洗辰雄, 1942 <위 글> 27

더욱이 일본 본국과 조선의 조직과 체계를 비교하면서 양자의 차이를 부각하고 조선이 일본 본국에 비해 앞선 면모를 보였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의 정신총동원운동 기구도 상하나 좌우가 일관된 정연한 조직을 이루고 있음은 자랑할 만하며 … 내지의 精動 본부가 하나의 연락기관이고 그 자신은 실천단체가 아니며 외부의 민중 에 대하여 실천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데 반하여 조선의 연맹은 그 자신이 실천단체이고 그 내부의 구성원이 곧 실행의 주체 …”<sup>39)</sup>

또한 《朝鮮行政》에 ‘時局講演資料’를 계속 연재한 和久正志도 精動朝鮮聯盟이 內地의 대정익찬회보다 몇 년 앞서 조직되었다는 점, 활동상 자발적으로 共助共勵한다는 점, 그 細胞單體인 愛國班 역시 自戒共勵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內地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그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sup>40)</sup>

이렇듯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연성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요인은 징병과 징용을 위해서였다.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에 치명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징병과 징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의 결과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병 대상 조선인 청년 중 일본어 해득이 가능한 자가 전체 인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에서 징병이나 징용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해서는 더욱 초등교육을 확충하여 不學의 생도를 없게 하는 것이 절대 필요의 전제이고 특히 조선인에게도 징병제가 시행됨에 당해서는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그 시행을 1946년으로 미루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연성을 통해 임기응변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는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을 제정하여 초등교육도 전혀 받지 못한 조선인 청년들에게 軍務 예비교육으로 國體관념 배양과 일본어 습득을 단기간에 시행하고 전쟁터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41)</sup>

39) 信原聖(總督官房 文書課長), 1940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運動の特異性> 《朝鮮行政》 7월호, 5

40) 和久正志, 1940 <通俗 時局講演資料(十三)> 《朝鮮行政》 11월호, 138~139

41) 조선총독부, 1944 《昭和19年 第86回 帝國議會說明資料(學務局)》



## 2. 徵兵制 施行 담론 구성과 졸속 시행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은 일제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담론화 작업에 나선 것은 南次郎 총독이다. 조선통치 세력의 독자적 세력 기반 확보와 결부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는 징병제 시행론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이 결정되자 일제는 內鮮一體·皇國臣民化와 연성론을 결부시키면서 모든 시책을 그에 맞추어 재조정해나간다. 따라서 조선통치 세력의 이데올로기 조성 작업은 징병제 시행에 이르러 일단락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징병제 시행 결정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종 대책도 졸속으로 급급히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은 1941년 9월에도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서 잘 살필 수 있다.

“우리들은 단적으로 말해서 半島人 青年에 의한 義勇隊의 조직을 주장하고 싶다. 內地와 똑같은 徵兵令을 말하고 싶지만, 아직 義務教育制에 도달하지 못한 半島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당면 가능한 길로서 나아가서 …”<sup>42)</sup>

그런데 실제로는 의무교육제가 시행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징병제 시행이 먼저 단행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징병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조선인의 황민화가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도 아니며, 병역 의무를 부담하려는 조선인의 열의와 여망에 응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은 태평양전쟁의 개전과 거의 궤를 같이하여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입안되었다. 육군은 앞으로 전개될 장기전에 대비하여 일본민족의 인적 국력 소모를 극도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외지 민족의 활용’이 필요하고 그 첫 번째 착수로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이 급선무로 떠올랐던 것이다.<sup>43)</sup>

징병제 실시에 따라 일제는 임기응변으로 조선인(대만인도 포함하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급히 내놓았을 뿐 아니라, 징병제에 직결된 소위 ‘共通法’을 손질하는 일도 절박했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朝鮮同胞 모두가 법률적으로 帝國

42) 1941, <社説 義勇奉公の秋! 半島人青年の蹶起を待望す> 《內鮮一體》 9월호, 5

43) 宮田節子(李榮娘 역), 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131~133

臣民(皇民)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공통법의 개정과 그 시행에 의하여 똑같이 朝鮮同胞가 내지인과 同格의 帝國臣民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이다.<sup>44)</sup>

그런데 일제가 당면한 고민은 징병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내선일체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달리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半島同胞가 內鮮一體의 실천에 透徹한 점”이 징병제 시행을 가져왔다고 하여 “이미 內鮮一體는 실현되었다”는 식으로 강변하기도 하였다.<sup>45)</sup>

그러나 실상은 ‘반도의 황민연성적 단계’를 고리로 한 희생·헌신의 내선일체론을 조성하고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 의무 부과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小磯國昭 총독이 부임 유고에서 성전 완수를 위해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국제본의의 투철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한 데서 살필 수 있듯이 조선의 현황은 내선일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응하여 징병제가 시행될 때까지의 2년간 특히 반도는 ‘맹렬한 자기연성’에 힘을 기울여야만 하며, 그동안 논의되던 각종의 독립론, 자치론, 협화론 등은 이제 모두 空論化되었으니 일본정신을 체득하고 목숨을 천황에게 바친다는 결의를 굳혀야 한다고 다그쳤다.<sup>46)</sup>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신의 자식으로서 감격스럽게 연성에 매진할 것만을 주문하면서, ‘황민연성’이야말로 반도의 새로운 단계에 즉응한 가장 강력한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게 된 것이다.

“특히 光輝로운 징병제도 및 의무교육제의 시행을 앞두고 神의 자식인 일본인으로서의 감사 감격을 한층 새롭게 함과 동시에 참으로 명실 공히 대동아의 중핵 지도자로서의 자기연성을 향해 일대 행진을 개시하고 있는 조선의 眞價를 물어야 할 역사적 중대시기를 맞았다.”<sup>47)</sup>

“내선일체의 방향은 확립되었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도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實이 아직 반드시 충분히 갖추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皇民으로서의 연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특히 반도 衆庶의 황민연성은 현하 반도의 최대 문제이다. … 징병제도의 시행은 皇民만이 담당하는 광영이고, 인류의 지도자로서의 실질을 갖추 수 있는 자만이 그 중책을 맡을 수 있다.”<sup>48)</sup>

44) 杉浦洋, 1943 《朝鮮軍報道部 監修 朝鮮徵兵讀本》 12월, 179~181

45) 朝鮮軍事普及協會 編, 《朝鮮軍報道部監修 朝鮮徵兵準備讀本》 69~70

46) 津田剛(綠旗聯盟 主幹), 1942 <徵兵制の施行と半島の革新> 《綠旗》 6월호, 10~17

47) 波田重一(總力聯盟 總長), 1943 <戰時國民生活に徹せよ> 《朝鮮公論》 2월호, 19쪽

48) 津田剛(綠旗聯盟 主幹), 1942 <小磯總督の着任と半島の新段階 - 皇民鍊成的段階の展開 - > 《綠旗》 7월호, 10~17

나아가 이처럼 급작스레 징병제 시행이 단행되었기에 “징병제의 취지에 합치하기 위해 힘껏 切磋琢磨하고 일본정신의 體得에 힘써, 실시에 故障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또한 內地人 병사에 조금이라도 遜色이 없도록 心身의 소질을 양성”<sup>49)</sup>하라고 다그치는 데서 보이듯이 실제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더욱 뚜렷이 구분하면서 일본인에게는 지도적 사명을, 조선인에게는 일방적 희생만을 鼓吹하는 식으로 더욱 뚜렷이 양자에 대한 구분·차별을 노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울러 내선일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권리나 의무에 대한 관념을 超絶한 정신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이 징병제도는 국민이 마음으로 폐하에 충성을 다한다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무 관념으로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권리나 의무 등을 超絶한 극히 숭고 존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은 징병의 의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그 代償的으로 어떤 종류의 권리를 요망하는 것과 같은 교환 조건적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sup>50)</sup>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결국 다음과 같이 조선인의 희생이 부족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희생을 다그치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 半島人の 희망을 대표하는 志願兵 가운데서는 2명의 戰死者와 약간의 戰傷者를 냈다. 사변의 초기에는 天津, 上海의 半島人義勇隊에서도 死傷者를 낸 일이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정도의 희생으로써 戰死傷 〇〇만을 헤아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 近親 緣故 중에 靖國의 神을 갖지 않음이 없는 內地人과 더불어, 時局을 말하고 喜憂를 서로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一億一心이라고도 하고, 內鮮一體라고도 한다. 興亞維新을 추진하는 이런 원동력의 一半을 分任하고, 균등하게 皇國臣民으로서의 영예를 가진 半島人으로, 內地人에 비하여 九牛의 一毛에도 相當하지 못하는 犧牲 負擔으로서 大東亞共榮圈 건설에서의 지도자적 우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厚顏無恥인 것은 아닌가. 단적으로 단정하여, 우리들 半島人은 內地人과 等量의 희생을 이 聖戰에 지불하고, 또 等量의 고통과 더불어 等量의 감격을 분담한다는 지향과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皇國臣民으로서의 자량은 오직 한결같이 滅私奉公, 헤아릴 가치 없는 우리 身命을 大義를 위해 天皇國家에 바쳐서 부끄럼이 없게 하는 데 있다. 皇軍의 精強 세계에 비함이 없는 까닭은 職으로서 이에 있다. 우리들 半島人 青年은 겸손하게 스스로 깊이 內省하여 이런 心境에 透徹하여 渾身の 至誠을 到處에 發露함으로써만 비로소 內地人에 追隨하여 皇道興亞의 眞義를 파악하고 內鮮一體를 體行할 수 있을 것이다.”<sup>51)</sup>

49) 朝鮮軍事普及協會 編, 《朝鮮軍報道部監修 朝鮮徵兵準備讀本》 85

50) 大久保弘一(陸軍 中佐·京城師團 兵務部), 1942 <我が國徵兵制度の根本義> 《綠旗》 7월호, 41

51) 1941 <大義奉行團結盟趣旨書(草案)> 《內鮮一體》 9월호, 7~8

“在鮮 內地人の 發奮을 기다리는 바가 많음은 물론, 皇國臣民으로서 이미 30여년의 수련을 거듭하고, 근래 빛나는 의무교육제도 및 의무병제 실시의 기쁨을 맞고 있는 半島同胞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 時局이야말로 자기를 높여서 인물을 玉成할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2)</sup>

일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여 이러한 순국 촉구 담론을 조성하고 선전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징병과 징용을 실행하여 사태를 미봉하기에 급급하였다. 당시 일제가 희생·헌신의 내선일체론에 입각해 내놓은 ‘소국민에게서 솟아나는 殉國의 기풍’이란 題下の 순국 촉구 담론을 보면 일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다.

“과거의 수많은 전쟁에 비하여 대동아전쟁의 특색은 소년의 힘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군대에서는 소년 비행병의 채용은 물론이고, 모든 兵科를 통하여 소년 지원병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많다. 과거의 징병제도는 21세를 적령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일선의 직접 전투는 청년의 힘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제일선의 전투는 20세 미만의 소년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참으로 크다. 진주만의 태평양함대도, 영국의 불침함대도 紅顏의 미소년의 육탄 挺身에 의해 격파되었다. … 금일의 少國民의 가슴속에는 중등학교 3·4학년으로서 이미 조국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고 이름도 버린다’는 殉國의 열정이 용솟음쳐 오르고 있다.”<sup>53)</sup>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갓 마칠 정도의 美少年들에게 죽음을 재촉한 것을 비롯하여, ‘즉각 身命을 던지자’,<sup>54)</sup> ‘자기의 職責下에 죽자’,<sup>55)</sup> ‘決死의 각오에 승리가 있다’,<sup>56)</sup> ‘1억 總入營을 단행하자’<sup>57)</sup> 등 오로지 죽음을 촉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 지배 이데올로기 注入 遲滯와 강제의 강화

일제는 內鮮一體의 실현을 공언하면서도 늘 조선인의 저항과 반발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계하였다.

52) 高宮太平, 1944 <一億不屈の意思を結集せよ> 《小磯統理の展望 第二輯》(京城日報社) 136

53) 1944 <社說 少國民に盛上る殉國の氣風> 《朝鮮公論》 4월호, 6~7

54) 1944 <社說 直ちに身命を投ぜん> 《朝鮮公論》 7월호, 4~5

55) 1944 <社說 自己の職責下に死せ> 《朝鮮公論》 8월호, 4~5

56) 1944 <社說 決死の覺悟に勝利あり> 《朝鮮公論》 9월호, 4~5

57) 1944 <社說 一億總入營を斷行せよ> 《朝鮮公論》 10월호, 4~5

즉 조선총독은 鮮·滿 국경 방면의 무장 공산주의자에 대한 경비를 촉구함과 아울러 조선인의 사상 경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건대 朝鮮民族은 오래도록 事大思想을 전통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有時 비상시에 즈음해서 인심의 동향을 틈탄 不逞輩의 음모에 대해 극력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常時 국민정신의 作興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朝鮮軍의 威容을 왕성하게 하고 警察力의 충실을 기하여 국가 不時の 變에 대비한 치안의 완벽을 바라는 바이다.”<sup>58)</sup>

일제는 조선인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 注入 작업의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하여 다음의 언급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우 민감하였다.

“금일 이미 陳腐한 時代錯誤의 물건이 된 小民族自決主義를 다시 주창하는 頑迷分子는 표면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다만 아직 예로부터의 전통을 끊지 못한 學園의 一隅나, 새로운 세계의 움직임에 인식할 능력이 없는 인물들 戶主로 한 가정의 어두운 곳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사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 現狀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애매한 말이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분명하다. 다소 사물을 철저히 생각해서, 全 半島人의 장래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취해야 할 태도, 가야 할 길이 즉시 분명하게 터득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 그대로의 小主觀, 小感情, 小利害 등에 구애되어 자기편을 행할 용기도 없고, 냉담한 체념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 小不滿을 가슴에 품거나, 혹은 유대인과 같이 이익만을 좇거나, 혹은 저급한 향락에 신경을 마비시킨 사람으로서 불나비 같은 삶을 사는 분자가 특히 대도시의 뒤편에 많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sup>59)</sup>

더욱이 小磯國昭 총독은 1942년 11월 11일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금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의 성과가 미진함을 솔직히 토로하였다.

“최후로 總力を 結集하는 데 대해 말하면, 內鮮同胞는 본래부터, 官民間은 道義에 입각하여, 더 한층 融和의 實을 향상시켜가 달라. ‘融和’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슬피해야 할 일이고, 時代錯誤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아직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總督 스스로가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에서, 학교에서,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이다. 총독으로서의 눈을 가리고 싶지만, 實情을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것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 참으로 슬픈 일이고, 또한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總力結集은 바랄 수 없다. 따라서 이겨내는 것도 곤란해진다. 着任 이래 國體本義의 透徹을 부르짖고, 道義朝鮮의 확립을 바라왔지만, 官民 모두가 비웃고 있다고 들었다. 國體本義의 透徹이나 道義가 없이는 總力結集은 있을 수 없다. 長期戰을 短期戰으로 終焉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道義를 확립하고, 國體本義에 투

58) 總督關係資料1(上奏書 外), <上奏書>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25, 19~22

59) 1941, <社說 義勇奉公의秋! 半島人青年의蹶起を待望す> 《內鮮一體》 9월호, 2~3

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독 자신이 時代錯誤라고 할 ‘融和’라는 말을 사용한 眞意는 실로 여기에 있다. 이 점 오해 없도록, 더 한층의 殉國精神으로써 總力結集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sup>60)</sup>

조선통치 세력이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졸속으로 支配 이데올로기를 계속 조성했던 것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오직 조선인을 표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공세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과 차별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부각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는 선구자로서의 사명과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반면, 조선인에 대해서는 진짜 일본인을 본받아 영광된 이름, 皇國臣民에 값하는 희생을 보이라고 끊임없이 재촉·질책하였다.

특히 일제는 징병제 시행을 맞아서는 이제 ‘內鮮一體’는 실현되었으므로 조선인에게는 희생과 헌신만 남았다면서, 실적의 저조함을 질타하고 죽음으로 임무를 완수할 것을 더욱 다그쳤다. 즉 조선 동포에게 징병령이 시행되었으니 이제 ‘감격을 증명할 만한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라’면서 “현재의 조선동포의 정신과 육체로써 일본군인으로서의 精華와 意氣를 發揚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sup>61)</sup> “적어도 황국의 신민된 자는 수많은 忠靈靖國의 신들이 이룩한 ‘靖國精神’을 체득하고 오로지 전력 결집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반도 2400만 민중도 ‘황국 군대의 신민’으로서 자각하고 이 靖國의 신들에게 ‘나도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sup>62)</sup> 또한 징병제도가 실시되었으니 “참으로 내선일체, 황국신민으로서의 光榮에 보답하여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깊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일본정신의 진수를 투철히”하여 ‘황민으로서의 본체’에 돌진하려고 재촉하였다.<sup>63)</sup>

그럼에도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 실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회의와 실망은 맹목적인 희생과 헌신을 더욱 강제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때 주목할 바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희생을 비교하면서 그 총량의 현격한 차이는 절대로 메워질 수 없으니 최소한 일본인에게 인정받을 정도라도 희생을 보여 ‘厚顔無恥’함

60) 高宮太平, 1944 <殉國精神を發揮せよ> 《小磯統理の展望 第二輯》(京城日報社) 52~54

61) 1942 <論壇 朝鮮同胞に徴兵令實施 感激を裏付すべく義務と責任を果せ> 《朝鮮公論》 6월호, 18~20

62) 倉茂周藏(朝鮮軍 報道部長), 1943 <自己を内省せよ> 《朝鮮公論》 2월호, 20

63) 波田重一(國民總力朝鮮聯盟事務局 總長·陸軍 中將), 1942 <半島に徴兵制度實施 皇民たるの本體に突入せよ> 《朝鮮公論》 6월호, 48~49

만은 면하라는 식으로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일본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인의 지도력과 우위성을 확고하게 찬양하는 논조를 지속하고 있어 대조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日本國民의 指導, 推進에 의하여 착실히 실행되고 있다. 우리들 半島人은 內地人과 똑같이 大日本國民으로서 대동아공영권에서의 지도자적 優位에 서는 영광을 갖게 되었지만, 과연 현재 정도의 자각으로 이러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猛省을 요하는 점은 없는가. 첫째로 이 聖戰에 지불하고 있는 희생을 보자.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生命인데, 內地人의 生命의 희생이 큰 데 대하여, 半島人은 얼마만큼의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志願兵으로서 戰死해준 이인석, 이형수 양군의 靈魂에 대하여, 全半島 青年의 이름으로 눈물로써 감사한다. 동시에 이와 비교할 수 없는 10만여 명의 戰死者를 낸 內地人에 대하여는 오직 묵묵히 모자를 벗고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半島에 비하여 內地는 ○○만의 戰死傷, 더욱이 臨戰態勢 강화에 따른 勞力 문제, 物資 문제 등에서 전혀 이야기가 다른데, 우리들은 이런 內鮮間의 불균형 상태를 잠자코 간과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하며, 양심에 찔릴 일이다. …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內地人의 희생에 대하여 보충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적어도 半島人 青年의 순수한 의기와 지향을 內地人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聖戰에 대한 감격을 나누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東亞의 地를 闊步할 수 있을 것이다.”<sup>64)</sup>

또한 내지 일본에 비해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각종 물자가 얼마나 풍부한가는 모두 놀라는 일이라면서 시국에 대한 비협조, 낮은 저축심, 국채나 공채 소화 성적의 불량 등을 질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조선인을 일본인과 비교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몰아붙이는 일이 관례처럼 행해진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sup>65)</sup>

많은 미사여구를 나열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무차별과 평등을 운위하기도 했지만 내선일체·황국신민화론은 철두철미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기획·구상·실천된 정치 슬로건이었다.<sup>66)</sup> 일본 본토나 조선 이외 지역의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 조선에 와서 살고 있던 일본인조차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소란을 떠는 데 의아해하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총독부 상공과장 井坂圭一良은 다음과 같이 일본인의 내선일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확인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64) 1941 <社說 義勇奉公의秋! 半島人青年의蹶起を待望す> 《內鮮一體》 9월호, 2~5

65) 御手洗辰雄(京城日報 社長), <新東亞と半島の將來>; 1942 <東亞の將來と朝鮮-光榮の日に備ふるの道> 《朝鮮公論》 2월호, 74~78 및 8월호, 20~26

66) 일례로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은 원래부터 조선인에게만 부과되었다. 정재정, <앞 논문> 420

“일부 조선인이 말하는 내선일체 즉 내선평등과 같은 일은 내선일체가 완수되는 경지에서의 문제이고 완수에로의 진행 단계에서의 어느 정도의 차별은 완수와 더불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특히 내선인 모두 인식하고 오해 없이 최후의 목적을 행해 매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내선일체에 백해무익한 내지인은 기탄없이 반도에서 떠나고 그 대신에 우수한 내지인은 한 사람이라도 많이 영구히 정주해서 살기 바란다.”<sup>67)</sup>

조선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내선일체’는 현실의 변화가 없이도 조선인 스스로 ‘자각’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현저하게 실현되었다고 강변하는 논자도 나오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즈음 특히 반도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변 하에서 ‘內鮮一體’의自覺은 크게 진전되었다. 5년 전, 10년 전에 비교하여 생각하면 전적으로 격세지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8)</sup>

일제가 절박한 응급 사태에 봉착해서 내놓은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內와 鮮, 즉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구분과 차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어 인상적이다. 더욱이 그러한 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조차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데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I. 맺음말

필자는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쟁기를 중심으로 일제 식민체제 및 정책과 지배담론을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활용 양상을 보면, 일단 어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그와 관련한 現狀과 事實,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인식까지도 이에 맞추어 다시 꾸며내는 방식이 취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이렇진대 정치 슬로건이나 지배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논리와 명분을 꾸며대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특히 1940년대에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럴수록 일제 지배 이데올로기의 논리적·사실적 허구성은 더욱 선명해진 반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요·強迫은 전면화·일상화되어 갔다.

일제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통한 視線의 전반적 특징을 꼽는다면, 始終 밖으로부터, 위

67) 井坂圭一良(朝鮮總督府 商工課長), <半島における經濟統制と內鮮一體> 《綠旗》 40~41

68) 1941, <社説 義勇奉公の秋! 半島人青年の蹶起を待望す> 《內鮮一體》 9월, 2



로부터 高壓的으로 내리누르고 있다는 점, 시혜적·온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로는 매우 積極的·攻勢的이라는 점, 조잡한 명분론을 내세우면서 事實과 實相을 은폐·호도하려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근원을 짚어보면, 의도한 목표, 즉 동원과 희생의 강요를 一元的·一律的으로 관철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특징의 연장선에서,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 본국과 조선통치 세력 사이의 절충과 타협 속에서 조성되어 간 일제의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의 성격과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의 組成과 집행에 조선통치 세력이 상당히 집단화·일체화하여 대응하고 있음은 인상적이다.

식민지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구사와 관련하여 핵심 근거가 된 것은 朝鮮 ‘特殊事情’論인데,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으며 의미 또한 다양하였다.

대체로 1910년대에는 ‘時勢와 民度’를 내세우면서 內地延長主義의 적용을 회피하는 구실로 활용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점진적 내지연장주의 담론 속에 용해되었다. 이러한 朝鮮 ‘特殊事情’論이 제 모습을 갖추고 부각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이다.

宇垣一成 총독기부터 朝鮮 ‘特殊事情’論은 조선에 근거를 두고 나름의 지배블록을 조성해나간 일제 조선지배층의 논리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南次郎 총독기에는 조선에서 組成된 지배 이데올로기가 일본 본국에 逆流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皇國臣民’論이나 鍊成論의 경직화와 실행의 강제, 그리고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의 전개 등 조선통치 세력이 조성한 논리 체계 및 강제의 경험과 방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 ‘특수사정’론이 1940년대 징병제가 시행되는 상황을 맞아 일본 본국의 聖戰論·대동아전쟁론과 조선 나름의 황국신민화론·연성론이 결부되면서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 헌신과 희생을 다그치는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권리 면에서 일본인과의 동등한 어떠한 요구나 주장도 차단하고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참된 일본인’·‘진정한 황국신민’ 등을 목표로 한 ‘皇民鍊成의 단계’를 새로이 내세우게 된다.

이제 그들에게 던져진 임무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朝鮮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조선인의 희생과 헌신을 재촉하는 일뿐이었으며, 그것은 황국신민으로서 끊임없이 연성하여 천황 폐하를 위해 순국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해가는 그러한 논리는 징병제 시행을 둘러싼 담론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징병제 시행 담론을 관통하는 특징으로는, 일본 본국에 대해 늘 先導性을 의식하고 있

다는 점, 조선인에 대하여 攻勢적으로 임하려 한다는 점, 상황이나 조건이 아직 못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한 목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공의 상황을 만들어 선전하는 명분론적 談論 구사가 앞선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내지인을 항상 우월한 지도적 위치에 두는 반면, 朝鮮人(半島人)에게는 罪意識까지 부추기며 희생과 殉國을 助長하고 있으며, 조선인의 저항·반발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성과의 미진함에 대하여 초조·조급해하고 있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징병제 실시에 당면해서 조선통치 세력의 위상과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일본 본국을 위한 꼭두각시의 역할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통해 조선 지배 세력이 추구한 독자적 자기 기반 확보 내지는 자기 목소리 구사는 일본 본국 정치 상황과의 상관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1930년대 이후 1940년대 초반까지 한시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좇으려 했던 일부 친일 조선인의 움직임은 더욱 한정적으로 결국 하수인의 기능과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일제 지배 체제 전반이 총체적 붕괴로 가는 경로 위에서 잠깐 동안의 완급 조절 정도의 의미를 가질 따름이었다.

본고를 통해 확인한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는 일제가 조선인을 죽음으로 내몬 전쟁 범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조선통치 세력이 구사한 각종 통치 담론은 단순히 논리나 선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정책과 담론이 일체가 되어 현실을 규정하고 또 수탈과 착취를 위한 인적·물적 동원, 나아가 성전·순국을 위한 희생을 강요 하면서 조선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남겼다.<sup>69)</sup> 따라서 일제가 조선인을 전쟁에 내몰고 죽음을 재촉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전쟁 범죄의 진상 규명과 반성을 위한 역사인식의 형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본의 주류 연구 경향은 식민지 주민과 식민지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연구로 일관해오는 태도를 보였으며, 최근의 연구자들도 과거 식민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식민지 제국 일본’론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역사 만들기에 분주하다.

일본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일제 지배 체제와 전시 체제에 관련한 연구 경향이 종래 도외시하였던 식민지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를 가짐에도

69) 조선인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야스쿠니 신사에 2만 1,181위의 조선인 위패가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불구하고 피식민국들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sup>70)</sup>

그런 까닭을 깊이 살피지 않는다면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그들만’의 연구에 매몰될 뿐만 아니라 침략과 전쟁의 책임을 망각했다는 명에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진지한 역사 반성의 자세로 전후 역사 인식과 역사교육에 임하여 독일·폴란드, 독일·프랑스 사이에 공동 역사교과서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sup>71)</sup> 오랜 동안 다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 작업을 거쳐 완성된 교과서에는 히틀러가 자행한 전쟁 범죄와 전쟁 책임, 특히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한 인간성 말살 프로젝트 및 제노사이드의 사실 확인과 분명한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반성 내용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sup>72)</sup>

일제 말기로 가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일제 지배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폐해는 인간성 개조, 인간성 말살, 강제적 동원과 희생 등 극단적 비인간화를 초래하였다. 일제 식민지 지배의 최종적 귀결, 한국인을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 한국인의 민족성 말살을 기도했던 제노사이드 정책의 메커니즘과 그 귀결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되짚어봄으로써 전쟁 범죄를 분명히 자각하는 새로운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천황에 대한 충성과 聖戰을 외치며 슬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두운 기억을 향수처럼 돌이키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미래를 향하여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의 역사를 구성하는 새로운 앞 길을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사 연구자 모두가 담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임을 생각할 때이다.

70) 마쓰모토 다케노리, <앞 논문> 350 참조.

71) 한운석, 2002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일-폴란드 간의 화해 노력> 《서양사론》 75 ; 김승렬, 2003 <속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49 ; 김승렬, 2007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관계사-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대화-> 《역사교육》 101

72) 페터 가이스, 기욤 르 랭트랙 지음, 김승렬 외 옮김, 2008 《독일 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휴머니스트)

## [비평문]

아리마 마나부(有馬學)

본 논문에서 저자는 “조선 통치세력이 보여준 독자적 움직임과 통치 담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 통치세력’이란 “조선총독, 조선총독부 관료, 조선군, 조선에 살고 있거나 조선과 이해를 같이한다고 표방하는 일본인 지식인과 민간인들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독자적 움직임’은 결국 소멸하고 통치 담론의 허구성만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이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요컨대 ‘조선 통치세력’이라는 독자의 주체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이데올로기 조작 등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적나라한 통치 권력(폭력)으로 노골화하는 것이 전시체제라고 결론을 지으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다면 무엇 때문에 애써 “각종 정치 슬로건과 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평가가 다소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아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좀 더 저자의 논의를 쫓아가 보자. 그 특징을 크게 정리하면, ‘통치 담론’의 경우 조선 ‘특수사정’론에서 내선일체론, 황국신민화론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하며, 거기에서 식민지 통치의 특징을 찾아내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세와 민도’를 근거로 하는 점진적 내지연장주의에서 ‘내선일체·황국신민화’론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 그 자체는 사실로 존재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평가라면 그러한 과정은 실물 경제의 변화나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변화의 총체 내에서 비로소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의 근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자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렇지 않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일제의恣意的·의도적인 자기 필요의 일방적 관철만을 위주로 하는 식”으로의 전환이며 그 과정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점차 선명해지며 그에 대응하여 조선인에 대한 “강요·強迫”은 전면화·일상화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애초부터 식민지 권력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의도에 합당한 假想의 현실을 실제처럼 여기게 만드는 교묘한 二重性を 구사”할 필요 따위는 없지 않았을까?

저자는 머리말에서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선전이나 操作作用 文句의 이면에 놓인 역사적 실체”를 묘사하겠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표층’과는 별도로 ‘역사적 실체’가

상정되어 버린다면 애초 왜 정치적 언어의 이데올로기 분석 등이 필요한가? 앞 문단의 인용으로 되돌아가자면 식민지 권력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의도’를 직접 실증적으로 밝히면 끝날 이야기가 아닌가?

평자도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전시기의 ‘담론’ 분석에는 관심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배 담론과 정치 선전에 요약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 지나지 않는다(표1, 표5). 표현을 바꾸자면 그것은 이데올로기 언어의 액면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 ‘담론’ 분석의 방법에 공식이 있을 리가 없으니 분석자가 스스로 개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 [집필자 답변]

필자가 판단하건대 비평문은 대체로 보아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째, 평자는 논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당해 시기 역사 전개 전반적 흐름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다. 즉 “이러한 흐름 그 자체는 사실로 존재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평자는 그러한 과정은 실물 경제의 변화와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그렇지만 평자는 근본적으로 논문의 기본 취지와 시각을 달리하면서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형식 논리 면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라든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각종 슬로건이나 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 할 필요 따위는 없지 않은가”, “... 등이 필요한가”, “... 밝히면 끝날 이야기 아닌가”, “... 불과한 것이 아닐까” 등의 표현을 통해서 논문의 취지와 논리 전개에 대한 평자의 강한 의아심을 쉽사리 읽을 수 있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해명과 반박이 필요할 듯하다.

우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필자의 판단으로는 오해와 더불어 본질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듯하다. 오해는 평자의 전공이 일본사라는 데서 비롯된다.[평자는 논문의 주에 인용하였듯이 《日本の歴史23 帝國の昭和》(2002, 講談社)를 저술하였다.] 필자가 전시체제를 한 묶음이 아니라 시시각각 국면별 변화에 주목하는 반면 평자는 ‘전시체제’를 뭉뚱그려 취급하는 것이나, 논지의 전반적 취지와 구체적 내용보다는 목차를 중심으로 표면의 문구만을 쫓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등은 근본적 시각차에 전공의 차이까지 겹쳐져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논문의 머리말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결부시키면서 담론 분석 위주로 접근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다. ... 본고를 통해 정책과 표방, 의도와 실행이라고 하는 서로 표(建前=다테마에)·리(本音=혼네)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일제의 제반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일제 말기로 갈수록 사실상은 상호 작용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평자는 단지 앞부분만을 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의 현실’이 ‘내선일체의 실현’을 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조선통치 세력이 일본과 조선,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와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을 어떻게 호도하면서 조선인을 ‘희생과

순국'이란 죽음의 구렁텅이로 일방적으로 내몰았는가가 초점임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술하게 '操作'된 지배 담론의 '이면에 놓인 역사적 실체'는 형식 논리가 아닌 조선인의 희생과 죽음에서 찾아야 한다.

필자도 평자의 지적처럼 “식민지 권력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의도’를 직접,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며, 담론을 넘어 일제의 행위와 정책으로 낱낱이 밝혀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별다른 죄의식이나 반성도 없이 입을 다물었으며 술한 증거와 문서는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은 일제 강점의 역사를 형식 논리가 아닌 내면으로 읽고 쓰면서 아픔과 고뇌를 공유하고 서로 사이에 쌓인 앙금을 극복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